

충남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 및 정책과제

신 동 호

충남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

cyberdhs@cni.re.kr

본 연구는 충청남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활용 실태를 파악해 지역의 현실에 적합한 관련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기존 정부주도의 정책이 지역에 투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

CONTENTS

1. 지역단위 외국인력 정책 필요성
2. 국내외 외국인 인력정책 동향 및 시사점
3. 충남 외국인 노동시장 현황 및 고용실태
4. 충남 외국인 인력 정책과제

요약

- ◀ 기존 외국인력 관련 정책영역은 국가단위의 외국인 노동시장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온 탓에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았음
- ◀ 충남도는 외국인력의 유입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 내 내국인 인력과의 보완적 활용,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간의 갈등, 지역주민과의 공존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지역노동시장의 주요 정책이슈로 대두되는 실정임
- ◀ 충남지역 외국인 인력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음
- ◀ 외국인 노동시장 및 고용과 관련한 지역단위 통계구축 재원을 마련하여 지역단위 외국인 고용조사를 실시해야 함
- ◀ 불법취업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의 보완적 활용차원에서 불법취업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력에 대한 현실성있는 관리·감독체계 정비가 시급함
- ◀ 정부주도의 고용정책 개선사항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외국인 고용행정의 간소화와 신속화 등 정책적 배려가 요구됨
- ◀ 내국인을 도내 중소기업체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제고사업이나 임금과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중소기업체를 발굴하는 공공차원의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 특히 도내 취약계층의 노동공급과 관련해 필요한 산업분야에 적정 미숙련 인력을 공급하는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 끝으로 정책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이 '충남 광역 외국인 근로자 센터 운영'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로 나타남에 따라 해당사업의 확대 검토가 필요함

01

지역단위 외국인력 정책 필요성

- 충남지역은 도내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인난 가중과 농·어촌 지역의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력의 유입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 도내 외국인력은 2013년 2만8,510명에서 2015년 3만5,351명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11.4%씩 증가하는 추세로 전국평균 8.0%를 상회하는 수준임
 - 2015년 기준으로 국내 유입된 총 외국인력은 60만8,116명으로 이 중 경기지역이 37.6%에 해당하는 22만8,836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서울 11만6,817명(19.2%), 경남 5만2,135명(8.6%), 충남 3만5,351명(5.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도내 시군별로는 제조업이 집중된 천안, 아산, 서산, 당진지역에 도내 총 외국인력의 71.9%인 25,432명이 유입됨
 - 반면, 제조업이 발달한 도내 서북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어업 부문의 일손이 부족한 군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임
- 기존 외국인력 관련 정책영역은 고용허가제를 토대로 국가단위의 외국인 노동시장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온 탓에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았음
 - 실제로 지역에서 요구되는 외국인력 수급은 일원화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루어지며, 유입된 인력의 관리 역시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짐
 - 이로 인해, 지역단위 외국인력 정책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나 제한적 범위 내 근로여건 개선 등에 머무르는 수준임
 - 충남도는 외국인 인력과 관련하여 총 4개 사업을 추진·시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쉼터와 지원센터 운영이 전부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외국인력의 유입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 내 내국인 인력과의 보완적 활용,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간의 갈등, 지역주민과의 공존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지역노동시장의 주요 정책이슈로 점차 대두되는 실정임
 -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 정부 주도의 정책집행이 지역에 투영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기존 국가단위 정책이슈가 지역단위에서 보완되어야 할 여지가 날로 커지는 추세임

02

국내외 외국인 인력정책 동향 및 시사점

- 해외 주요국들의 외국인 인력정책 동향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표 1>
- 첫째,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제도개선을 통해 날로 치열해지는 국가 간 전문인력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함
 - 국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자격, 능력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여 맞춤형 인재의 유입을 고려해야 함.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출입국 시 서류 간소화, 별도창구 마련 등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가족의 국내 취업절차를 손쉽게 하는 등 국내에 거주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국가 장학생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유학생의 절대 비중을 늘리고 졸업 후 국내 취업을 적극 지원함
- 둘째, 취약계층의 노동공급이 혼란스럽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산업 분야에 적절한 미숙련인력을 공급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함
 - 산업 분야별과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적정 도입규모를 도출해야 하며, 내국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채용공고 등 내국인 고용노력을 제도화한 노동시장테스트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함
 - 또한 외국인력 고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셋째, 사회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통해 내·외국인 간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정책을 강화해야 함
 - 즉, 다양성을 고려하여 수요자 맞춤형 언어·직업 교육의 실시를 고려해야 하며,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력이 손쉽게 정보를 획득하고 내·외국인 간 소통을 제고하기 위한 다문화방송(Ethnic Media)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1〉 해외 주요국의 외국인력정책 비교

구분	미국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UAE	카타르
인력정책 전반	“적극적인 전문인력 유치와 체계적인 미숙련인력 관리(유입억제)” 정책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 도모						
전문인력	유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풀브라이트에서 연간 약 8천명 유치 - 학위취득과 동시에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 신설('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ndavour Scholarship Program에서 연간 약 3천명 유치 - 저렴한 의료보험, 장학금 등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mpus France (Agency)를 통해 연간 약 만명 유치 - 생활비, 기숙사, 등록금, 비자발급 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ASSO(독립행정법인)에서 연간 4-6천명 유치 - 장학금, 항공료, 수업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시간대 등 외국 유명대학 유치 - GCC 국가간 학생 교류프로그램 운영 	
	우수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비자 발급시 다중 우선순위 제도 - 출입국시 절차간소화, 정주와 가족취업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블루카드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블루카드제도 도입 - 별도의 입국전용 창구를 제공하고 가족동반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비자 발급시 점수제 도입('12) - 배우자와 자녀의 입국과 체류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기업차원에서 우수인력 채용 	
미숙련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주 추천제 (고용허가제와 유사) - 노동시장테스트 (채용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허가제 - 노동시장테스트 (채용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허가제 - 노동시장테스트 (채용공고, 30개 직종은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실습제도 - 노동시장테스트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허가제, 스폰서제도 - 외국인 고용시 내국인 고용 의무화 추진 중 	
	차별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권법(19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종차별법(19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차별금지법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기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노동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법
사회통합	정책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안보부와 신하 7개 집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민·시민권부(D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이민난민청 (BAMP), 사회통합 자원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부처와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무부 이민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부
	사회통합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교육프로그램 (EIE) 제공 - 온라인으로 미국생활 기본소양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성 호주” 프로그램 - 무료 언어훈련, 직업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통합코스에서 독일어 교육 등 수행 -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정부는 1년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과 수용·통합계약을 맺어 사회통합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정책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정책 없음

자료 : 기획재정부, 주요국의 외국인력정책 트렌드 분석과 시사점, 2012.

- 한편, 국내 외국인력정책은 저숙련 외국인력정책과 전문기술 외국인력정책으로 크게 구분되어 추진되어 왔음
 - 저숙련 외국인력 정책의 경우, 1980년대 후반 이후 중소제조 및 건설분야 등을 중심으로 단순 기능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1991년 11월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를 도입
 - 동 제도는 해외투자기업이 현지법인을 통해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당 인력이 중견 기업 이상의 해외투자기업에만 집중되는 한계를 보임
 - 이에 정부는 1993년 11월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300인 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대해 외국인 연수생의 활용을 허용함
 - 국내 외국인력정책의 핵심제도로 활용되었고 2007년 1월 고용허가제로 통합되었으나 산업연수생은 도입 규모가 제한적이며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려워 2004년 4월 해당 연수생이 근로자 신분으로 전환취업이 가능한 연수취업제를 도입하기에 이룸
- 동 제도의 허용업종은 중소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으로만 제한되어 서비스업의 경우 불법취업이 만연한 탓에 2002년 12월 외국국적 동포 대상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취업관리제를 도입함
 - 그러나 상기의 제도를 통한 제한적인 인력도입이 국내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고 불법취업 문제를 양산하는 등 다양한 한계를 드러냄
 - 이에 정부는 2003년 8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4년 8월 고용허가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 이룸
- 충남도 외국인력정책은 외국인 근로자 대상 권익보호 및 근로여건 개선, 주거제공 등에 한정됨
 - 2017년 현재, 총 4개 사업을 시행 중이나,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와 충남광역시 외국인 근로자 쉼터 등 지원기관 운영이 핵심이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는 천안, 아산, 서천, 당진 4개 지역에 기 개소 하였거나 예정중임
 - 사업비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종사자 역량강화사업과 충남 광역 외국인 근로자 쉼터 운영 사업은 도비 100% 사업인 반면, 외국인 근로자 쉼터 운영사업과 외국인 근로자 상담활동 지원사업은 도와 해당 시군 간 매칭사업임
 - 운영주체 기준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종사자 역량강화사업과 충남 광역 외국인 근로자 쉼터 운영사업은 도 주관 사업이며, 외국인 근로자 쉼터 운영사업과 외국인 근로자 상담활동 지원사업은 해당시가 운영하고 있음

〈표 2〉 충남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주요 내용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450만원(도비 100%) - 사업대상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종사자 및 담당공무원 - 사업내용 : 지원센터간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공유, 종사자 교육을 통한 지원서비스 질적제고
충남광역시 외국인 근로자 쉼터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1억5,000만원(도비 100%) - 사업대상 : 도내 외국인 근로자 - 사업내용 : 사업장 폐쇄, 임금체불, 산재, 폭력 등의 인권침해 및 실직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지원 (재취업 전 숙식 제공(1개월) 및 구직지원, 사회적응 및 안정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 위탁기간 : 2018년 말(충남광역시 외국인 근로자 쉼터 위탁선정 심사)
외국인 근로자 쉼터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1,000만원(도비 50%, 시군비 50%) - 운영주체 : 아산시 - 사업대상 : 도내 외국인 여성근로자 - 사업내용 : 주거시설 임대운영(주공 2단지 아파트 101동 402호)
외국인근로자 상담활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2억2,000만원(도비 30%, 시군비70%) - 운영주체 : 천안, 아산, 서천, 당진 - 사업대상 : 도내 외국인 근로자 - 사업내용 :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사업비 지원(권익보호 및 근로여건 개선)

자료 : 충남도 내부자료(2017).

03

충남 외국인 노동시장 현황 및 고용실태

- 국내 외국인 근로자 추이변화를 살펴보면 2013년 52만906명에서 2015년 60만8,116명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8.0%씩 증가하는 추세임
 - 광역시도별로는 제주지역의 연평균 증가율이 17.3%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충북 15.2%, 전남 13.6%, 울산 12.8%, 경북 12.2%, 충남 11.4%, 경기 10.5%, 전북 10.3%, 광주 9.0%, 경남 8.7%, 강원 8.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동 기간 중 국내 지자체 중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아진 지역은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지역임

〈표 3〉 전국 시도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

구분	2013		2015		연평균증가율(%) (‘13~’15)
	외국인근로자(명)	비중(%)	외국인근로자(명)	비중(%)	
합계	520,906	100.0	608,116	100.0	8.0
서울	116,113	22.3	116,817	19.2	0.3
부산	15,938	3.1	17,299	2.8	4.2
대구	10,639	2.0	12,348	2.0	7.7
인천	26,399	5.1	30,189	5.0	6.9
광주	6,345	1.2	7,538	1.2	9.0
대전	3,641	0.7	3,759	0.6	1.6
울산	10,829	2.1	13,779	2.3	12.8
세종	1,650	0.3	1,771	0.3	3.6
경기	187,392	36.0	228,836	37.6	10.5
강원	5,031	1.0	5,893	1.0	8.2
충북	14,602	2.8	19,371	3.2	15.2
충남	28,510	5.5	35,351	5.8	11.4
전북	9,364	1.8	11,389	1.9	10.3
전남	12,375	2.4	15,974	2.6	13.6
경북	23,475	4.5	29,530	4.9	12.2
경남	44,142	8.5	52,135	8.6	8.7
제주	4,461	0.9	6,137	1.0	17.3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2016.

- 2015년 현재, 도내 외국인 근로자는 총 3만5,351명이며, 이 중 천안지역이 가장 많은 1만 1,015명으로 31.2%로 차지하며 다음으로 아산 9,247명(26.2%), 당진 3,606명(10.2%), 논산 2,127명(6.0%), 보령 1,780명(5.0%), 서산 1,564(4.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도내 외국인 근로자 추이변화를 살펴보면 2013년 2만8,510명에서 2015년 3만5,351명으로 연평균 11.4%씩 증가하는 추세임
 - 시군별로는 홍성지역의 연평균 증가율이 22.6%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공주 21.0%, 보령 17.3%, 부여 16.8%, 태안 14.7%, 금산 13.7%, 서천 13.1%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산업집적지역인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서북부권 지역에 도내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71.9%인 2만5,432명이 거주하고 있음

〈표 4〉 충남 시군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

구분	2013		2015		연평균증가율(%) (‘13~’15)
	외국인근로자(명)	비중(%)	외국인근로자(명)	비중(%)	
합계	28,510	100.0	35,351	100.0	11.4
천안시	9,024	31.7	11,015	31.2	10.5
공주시	447	1.6	654	1.9	21.0
보령시	1,293	4.5	1,780	5.0	17.3
아산시	7,461	26.2	9,247	26.2	11.3
서산시	1,411	4.9	1,564	4.4	5.3
논산시	2,036	7.1	2,127	6.0	2.2
계룡시	56	0.2	66	0.2	8.6
당진시	2,773	9.7	3,606	10.2	14.0
금산군	494	1.7	639	1.8	13.7
부여군	398	1.4	543	1.5	16.8
서천군	643	2.3	822	2.3	13.1
청양군	229	0.8	259	0.7	6.3
홍성군	756	2.7	1,137	3.2	22.6
예산군	910	3.2	1,130	3.2	11.4
태안군	579	2.0	762	2.2	14.7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2016

- 한편, 충남의 경우 2016년 하반기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총 12,941명으로 전국 대비 7.7%를 차지하고 있음¹⁾

1) 그간 추진되던 다양한 외국인력 관련제도가 2004년 8월 현행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었으며, 순수외국인 대상 일반고용허가제와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허가하는 특례고용허가제로 구분됨.

- 또한 도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하반기 1만2,941명에서 2016년 하반기 1만6,986명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7.7%씩 증가하는 추세임
- 구체적인 전국대비 비중추이를 보면 2012년 하반기에 7.9%에서 2013년 하반기 7.6%, 2014년 및 2015년 하반기 7.3%로 지속 감소하다 2016년 하반기에는 7.7%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표 5〉 전국 고용허가제 고용동향

구분	2012하반기		2013하반기		2014하반기		2015하반기		2016하반기		연평균 증가율(%) (‘12~’16)
	근로자수 (명)	비중 (%)	근로자수 (명)	비중 (%)	근로자수 (명)	비중 (%)	근로자수 (명)	비중 (%)	근로자수 (명)	비중 (%)	
합계	162,858	100.0	178,200	100.0	204,162	100.0	212,319	100.0	221,914	100.0	8.0
서울	1,572	1.0	1,390	0.8	1,630	0.8	1,576	0.7	1,777	0.8	3.1
부산	6,462	4.0	6,597	3.7	7,638	3.7	7,977	3.8	7,951	3.6	5.3
대구	4,590	2.8	5,081	2.9	5,880	2.9	5,976	2.8	5,935	2.7	6.6
인천	9,988	6.1	11,129	6.2	12,211	6.0	11,804	5.6	11,868	5.3	4.4
광주	2,858	1.8	2,991	1.7	3,389	1.7	3,460	1.6	3,517	1.6	5.3
대전	568	0.3	613	0.3	590	0.3	707	0.3	677	0.3	4.5
울산	4,135	2.5	4,320	2.4	4,936	2.4	5,051	2.4	4,526	2.0	2.3
세종	490	0.3	687	0.4	803	0.4	879	0.4	943	0.4	17.8
경기	61,233	37.6	69,445	39.0	79,196	38.8	82,235	38.7	89,085	40.1	9.8
강원	1,859	1.1	2,091	1.2	2,347	1.1	2,664	1.3	2,846	1.3	11.2
충북	6,901	4.2	8,106	4.5	9,457	4.6	10,061	4.7	11,476	5.2	13.6
충남	12,941	7.9	13,531	7.6	14,899	7.3	15,563	7.3	16,986	7.7	7.0
전북	4,925	3.0	5,443	3.1	6,127	3.0	6,482	3.1	6,693	3.0	8.0
전남	5,814	3.6	6,182	3.5	7,881	3.9	8,930	4.2	9,360	4.2	12.6
경북	12,135	7.5	13,338	7.5	15,688	7.7	15,725	7.4	15,846	7.1	6.9
경남	24,832	15.2	25,553	14.3	29,671	14.5	31,065	14.6	29,873	13.5	4.7
제주	1,555	1.0	1,703	1.0	1,819	0.9	2,164	1.0	2,555	1.2	13.2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 한편, 충남도 내 외국인 근로자의 대륙·국적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대륙별로는 동북아시아가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39.2%인 1만3,870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동남아시아 1만3,560명(38.4%), 남부아시아 4,275명(12.1%), 중앙아시아 2,752명(7.8%) 등의 순임
 - 국가별로는 중국(한국계)이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34.7%인 1만2,252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베트남 3,738명(10.6%), 캄보디아 3,279명(9.3%), 인도네시아 2,638명(7.5%), 태국 1,821명(5.2%) 등의 순임
 - 특히, 전체 중국(한국계)근로자의 88.4%인 1만828명이 서북부 지역인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04 충남 외국인 인력 정책과제

- 국내외 외국인력 정책검토, 도내 외국인 고용통계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도출된 향후 정책과제를 국가와 지방차원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국가차원에서는 외국인 노동시장 및 고용과 관련한 지역단위 통계구축이 필요함
 - 실례로 외국인력과 관련한 이용 가능한 통계는 법무부, 행안부, 통계청 등에서 생산하고 있으나 법무부와 행안부는 외국인의 출입국 파악이나 효율적 관리를 주목적으로 관련통계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외국인 노동시장 및 고용 통계는 전국을 7개 광역단위로 구분하고 있어 광역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임
 - 따라서 충남도와 시군 역시 향후 이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여 지역단위 외국인 고용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정부 차원의 외국인력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시급함
- 둘째, 불법취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각종 범죄발생, 인권침해, 그리고 지역의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함
 - 불법취업문제에 대해서는 합법적 근로자 신분으로의 전환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가 높으나 외국인력의 보완적 활용차원에서 불법취업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력에 대한 현실 적합한 관리·감독체계 정비가 우선 시급함
 - 나아가 이러한 사회경제적 문제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므로 내외국인간 사회갈등을 줄이고 통합하기 위한 사회통합정책을 확대해야 함
- 셋째, 현행 정부주도의 고용정책 개선사항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외국인 고용행정의 간소화와 신속화가 필요함
 - 구체적으로 한국어 강습 및 생활문화 관련 교육프로그램 확대 운영과 외국인력의 노동생산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업종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기능 및 기술교육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시급함

- 지방정부차원에서 볼 때 중소기업체의 만성화된 인력 수급란은 내국인력의 중소기업체 기피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함
 - 다시 말해, 도내 청년계층의 구직란과 외국인력의 내국인력 대체간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명확치 않으므로 산업계가 당면한 구인란 해소를 위해서는 향후에도 외국인력의 보완적 활용가치는 지속될 것임
 - 따라서 내국인을 도내 중소기업체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제고사업이나 임금과 근로 조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중소기업체를 발굴하고 관련 정보구득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공공차원의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미숙련 인력정책의 경우, 공급 주도적 제도(supply driven system) 중심이든 수요 주도적 제도(demand driven system) 중심이든 사례조사 대상 7개국 모두에서 취업업종과 쿼터 등을 엄격히 관리하는 추세이며, 일부 국가는 내국민 고용을 일정부분 의무화하려는 경향을 보임
 - 특히 취약계층의 노동공급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산업분야에 적정 미숙련 인력을 공급하는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2015년 현재, 충남도 내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은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기타로 구별된 7,388명을 논외로 치더라도 총 13개국으로 다양함
 - 외국인력의 상당수가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외국인력지원센터 내 다양한 국적의 피상 담자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인력충원이 필요함
 - 또한 도내 외국인력지원센터는 제조업이 집적된 서북부 지역 중 서산을 제외한 천안, 아산, 당진과 서천 지역에 총 4개소가 기 개소하였거나 예정 중임
 - 따라서 외국인 인력수요 정도는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15개 시·군 모두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 외국인력지원센터의 필요성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됨
 - 한편, 현재 정책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은 충남 광역 외국인 근로자 쉼터 운영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내 종사자 역량 강화로 나타남에 따라 해당사업의 확대가 필요함

신 동 호 선임연구위원
 충남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041-840-1161, cyberdhs@cni.re.kr

※ 본 글은 충남연구원 2017 전략과제 “충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 및 정책과제”를 요약, 재구성한 것임.

- 강수돌(1996),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관리 실태와 정책대안, 한국노동연구원.
- 유길상 외(2004), 외국인력제도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 유길상 외(2004), 저숙련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유길상·이규용(200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 외(2005), 전문기술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 외(2007),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및 중장기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 외(2007),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 외(2011),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 외(2015), 이민정책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2007), 외국인력정책 변화와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박성재(2011), 외국인력 구용구조와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 이민정책연구원(2014), 숙련기능 외국인력 활용방안 연구.
- 이상돈(2017), 인력수급전망과 외국인력 수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진화(2003), 중장기 외국인력 적정수요 전망(제조업 생산직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 중소기업연구원(2008), 적정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을 위한 수급모델 개발 및 고용허가제 제도개선.
- 최경수(2012), 외국인력 유입의 내국인에 대한 영향, 경제학연구 제61집 제3호.
- 최영기 외(2009),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경제학회(2009),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력 유치정책 방향.
- 한국노동연구원(1995), 외국인력관련법제 및 정책의 국제비교.
- 한국노사관계학회(2011), 외국인력 근로실태 및 수요조사.
- 한국이민학회(2008), 전문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 한국이민학회(2012), 외국인력 도입 관리시스템 개편방안 연구.
- 한성대학교(2010), 외국인력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 현대경제연구원(2015), 외국인력 도입 노동시장테스트 연구.